

“백신 접종자, 집합금지 면제·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민주 백신·치료제 특위, 자가격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에 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도...접종 참여율 높여 일상생활 앞당겨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이러한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전혜숙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문제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 의원이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여권”과 관련해선 전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함께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백신 불안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백신 맞기 운동에 나서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의원들이 벌써 40여명 넘게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자의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QR 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을 구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위에서 송영길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 전 세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백신 스왑 수준을 넘어서 공동 생산, 기술과 저희 생산능력이 결합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쾌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지사·시장·군수 등 200여명 대상 투기 의혹자 내년 지방선거 폐널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민주당은 땅투기 의혹 또는 2채 이상 주택 소유 공직자·공직입후보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2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도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게 공문을 내려보

냈다. 공문 제목은 ‘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협조요청 건’이다.

공문에서 전남도당은 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양식에 맞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공직자 자신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도당은 필요할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정부 기관 등 부동산 투기 조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공문에

담았다.

부동산 전수조사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은 도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다. 광역단체장(전남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200명을 웃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2주택자 이상 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입후보자의 경우 차기 선거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폐널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이준석 지지도 30%’ 후폭풍...계파 지원설 수면위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내에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주자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지원설까지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길리서치가 지난 22일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에서 30.1%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도는 12.7%포인트 높은 지지도다.

이 전 최고위원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는 “안정보다는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방향성을 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경륜을 앞세운 나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측은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라며 “지금까지의 조사는 당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권 레이스 초반 이 전 최고위원이 치고 나가자 그를 향한 견제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다른 주자들은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오 시장의 지지를 받은 것은 물론, 초선 당권주자인 김웅 의원과 함께 ‘유승민계’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합뉴스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김주영 의원 청년몫은 이동학 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4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초선인 김주영 의원을 의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노동계 몫으로 김 의원을 의결했으며 당무위를 거쳐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는 이동학 전 전국청년부 부위원장을 청년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명이 당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연합뉴스

김오수 “정치 중립 논란 유감...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최재형 감사위원이 인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약 2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친정권 인사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예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여성 농어업인의 안전 및 성평등 관련 사항 추가 ▲각종 정책·사업에 통한 여성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 농어업인의 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반반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정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든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치구)	신축원룸 (매매)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p>010-4667-9820</p>